

예술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장 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

국제문화예술교류

7월 4일(금) 오후 2시

■ 1회 문학
6월 30일(월)

■ 2회 시각예술·다원예술
7월 1일(화)

■ 3회 연극·무용
7월 2일(수)

■ 4회 음악·전통예술
7월 3일(목)

■ 5회 국제문화예술교류
7월 4일(금)

■ 6회 생활 속의 예술·문화복지
7월 7일(월)

■ 7회 제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7월 11일(금)

차례

국제문화예술교류	
• 발제	
- 국제문화교류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1	홍기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 한국 예술지원사업과 진흥정책의 국제적 수준을 확보하는 계기로서의 국제교류 사업을 이야기하자 16	박신의(한국문화예술위원, 남북및국제문화교류소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교수)
- <국제문화교류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문 21	권세훈(한국문학번역원 교류협력팀장)
-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24	방현석(소설가/계간<아시아>주간)
- 공연예술의 국제교류는 문화예술 정책의 독립영역인가? 26	최석규(프로듀서, AsiaNow,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국제교류	
* 사회: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장)	
발제(각 20분)	
14:00~14:20	발제 : 흥기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각 10분씩)	
14:2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신익(한국문화예술위원, 남북및국제문화교류소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교수) - 권세훈(한국문학번역원 교류협력팀장) - 방현석(소설가/계간<아시아>주간) - 최석규(프로듀서, AsiaNow,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15:10~16:10	지정 및 자유토론

발제

국제문화교류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홍기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현대사회가 인구, 자본, 기술, 문화 등 모든 것이 국경 없이 이동하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활동이 구심점 없는 흐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이동, 교환, 섞임, 흐름은 개인의 차원이나 개별적 집단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경우 문화적 본질에 충실한 활동인 것으로 족하지만 정부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국가적 이미지 제고 여부, 교류의 후속적인 효과나 성과 도출, 교류에 따른 부가적인 이득의 고려 등 교류 자체가 갖는 미덕 이외의 광범위한 목적을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도 한다. 즉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을 진흥한다고 할 때 그 주체가 민간인 경우와 그러한 행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목표와 관점의 차이가 내재할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화부문에서의 국제적인 교류는 국가정책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작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성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가 정부의 업무로서 편입되게 되면 다시 그 안에서 목표와 방법에 대한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구분이다. 문화외교는 ‘특정국가의 정부기구 또는 그 정부기구의 지원을 받는 특정단체가 자국의 문화적 국가이익을 대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활동’(김명섭, 2002)이라고 정의된다. 혹은 문화외교정책(Auswärtige Kulturpolitik)이란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국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문화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이해관계에 입각한 정책’(Hans Arnold, 198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문화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국가의 국제적 이익’이라는 전방위적 개념보다는 문화적 관점이 조금 더 투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르놀

트와 같이 개념 규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대외 문화정책이란 이상적으로는 권력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게 ‘예술과 문화 그 자체의 목표들과 절차’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정책과는 목표의 차원에서도 구분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정책’의 문제를 논의하는 어려움은 이렇게 문화적 관점과 외교적 관점에 덧붙여 예술위원회와 같이 민간조직의 활동까지를 아울러야 할 때에 더욱 어려워진다. 어찌보면 한국의 국제문화예술교류정책의 환경은 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전통적인 논란에서부터 민간의 자율적인 행위까지를 어떻게 조정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본 발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현황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보다 각각의 행위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유효한 역할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 정부 국제문화교류지원의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우선 문화부의 경우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지원은 크게 국가단위의 문화교류활동 지원,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해외교류 지원, 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해외주재 한국문화원), 전략적 국제교류(한류 및 한스타일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담당부처로서는 문화정책국의 국제문화협력과가 중심이 되지만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퍼져 있으므로 예술국을 비롯한 문화산업콘텐츠실과 관광산업국 그리고 체육국이 모두 관련되는 구조이다.

〈표 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 관련 업무

담당국	하위부서	업무내용
문화정책국	국제문화협력과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국어민족문화과	국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어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한국학 및 한민족문화역사에 대한 기획·연구 음식, 주거, 복식 등 생활문화의 진흥
예술국	예술정책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재원의 조성 및 운영
문화콘텐츠 산업실	출판인쇄산업과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포럼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및 광고제작활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의 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담당
	콘텐츠진흥팀	콘텐츠관련 판매촉진활동의 지원 및 콘텐츠 관련 국제교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한 업무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기금의 조성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국제관광과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의 입안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국제관광박람회 및 행사의 지원 국제회의산업 및 국제회의 전문인력 육성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체육국	국제체육과	국제체육교류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스포츠 외교지원 전문인력 양성

예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국제문화교류시설 인프라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코리아센터의 건립) 국제행사, 예술단체 및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각각의 부서별 업무분야와 계기성 사업의 수요에 따른 지원내용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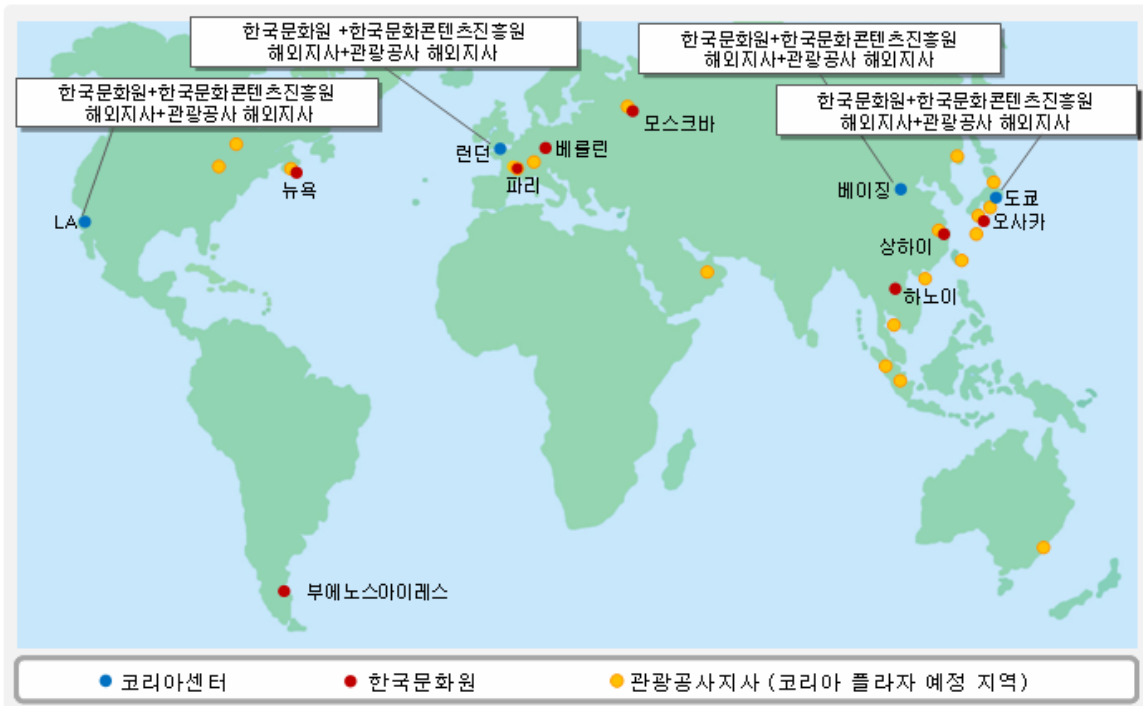
〈표 2〉 문화관광부 국제문화교류영역 항목별 지출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대항목	소항목	2005	2006
문화예술	문화예술 해외홍보 및 교류*	11,401	11,368
전통문화 콘텐츠	한스타일 지원,육성	821	1,088
한국어	세종학당 개설, 운영	1,041	928
문화시설 건립	재외 문화원 건립 및 운영	20,542	13,478
인적교류	국제 문화계 인사교류	964	2,857
산업교류	문화산업교류	3,000	2,997
미디어교류	문화미디어교류	15,679	3,442
관광교류	국제관광교류 및 홍보 (관광기금 포함)	79,590	71,245
체육교류	국제 체육교류	1,544	1,813
총 계		134,582	109,217

주1) * 균형발전특별회계비 포함

주2) 문화산업교류 및 관광교류사업비에는 각각 해당사업운영을 위한 인적교류지원사업비가 포함됨

특히 해외문화원의 경우 해외주재 한국문화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의 해외지사 그리고 관광공사의 해외지사를 한 곳에 모아 입주시키는 코리아센터의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코리아센터는 한국의 문화관련 시설이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고하는 동시에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시설로서 설립추진비는 2005년~2010년까지 국고 이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매년 160억 원씩 지원될 계획이다.



〈그림 1〉 코리아센터 및 한국문화원 분포 현황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리아센터 및 해외주재 한국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우 적으며(운영예산) 그나마도 공간이 임대 형태인 경우에는 고정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사업예산에 제약이 큰 실정이다. 필연적으로 자체기획사업 보다는 소액다건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형식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3〉 해외문화원 운영 현황

구분	위치	규모	공간구성	인력	예산(천원)	특징
도쿄	東京都港区南麻布 1-7-32	783.5㎡	전시실, 강의실, 도서/영상자료실, 사랑방	11	1,458,167	한류관련 프로그램, 유교문화 동질성 활용
오사카	大阪市北区中崎 2-4-2 4階	1,188㎡	전시실, 강의실,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한카페	5	826,239	한류관련 프로그램
뉴욕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813.2㎡	전시실,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사랑방	7	1,304,379	뉴욕타임즈 한국관련기사집 발간, UN 무대 활용 행사 개최
L.A.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1814㎡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자료실	9	1,174,841	미 중서부 지역 거점 네트워킹
파리	2 avenue d'Iena 75116 Paris	809㎡	다목적실, 전시실, 강의실,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8	1,095,977	미술분야 특화 지원
런던	개원예정	-	-	-	-	-
베이징	북경시 광화로 광화서리 1호	6,302㎡	다목적실, 전시실, 강의실, 자료실,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도서실	10	674,508	한류관련 프로그램
상하이	上海市 徐汇区 漕溪北路 396号 汇智大厦 2~4楼	2,671㎡	다목적실, 전시실, 강의실,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공연장, 회의실	12	326,193	한중 역사적 의의 환기
모스크바	Vorontsovo pole 3, Moscow	604㎡	다목적실, 전시실, 강의실,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6	952,546	문학인 교류활동 강화
하노이	49 Nguyen Du, Hai Ba Trung, HaNoi	830㎡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회의실	6	335,394	전통문화보다는 현대문화에 초점, 어린이 방문 프로그램
베를린	Luetzowufer 26, 10787 Berlin	700㎡	전시실, 강의실,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5	861,469	지역별특성에 맞는 행사 추진, 문화예술인 법률자문서비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Coronel D az 2884,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390㎡	전시실, 강의실,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공연장, 예술활동실	6	650,000	야간강좌 및 문화행정실 개설

주: 공통적으로 한국관련 공연 및 전시회 개최, 한국어 및 상설문화강좌, 영화상영회, 한국 관련 각종 공연, 전시 및 행사 지원, 한국음식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국제교류분야 예산이 각각 약 51.3억 원으로 전체 위원회 예산 대비 8%가량을 차지한다. 내용별로 보면 개별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기반 구축사업, 기관교류, 비엔날레 지원, 그리고 레지던스 사업이 그 뒤를 잇는다.

〈표 4〉 문화예술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예산

	2007년	2008년	증감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2,922	2,850	△72
	베타니언 한국작가 파견 지원	65	62	△3
	국제예술기구 활동 지원	160	250	90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280	264	△16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참가지원	150	150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513	512	△1
	해외문화기관교류 및 해외정보사업	401	450	49
	해외주요예술인 초빙프로그램 지원	96	96	-
	해외한국문학자원 기초조사	50	-	△50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기반 구축	500	500	-
	계	5,137	5,134	△3

조직상으로는 예술지원컨설팅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예술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개발 극대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8년도의 세부목표로는 문화예술 교류 협력 및 기획사업 발굴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국제교류지원사업 단순지원을 탈피하고 기획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으로는 일반공모사업 지역이관과 연계, 국제교류지원, 남북및 재외동포지원사업, 국제기구지원사업 기획성 강화(신규 지원사업 개발 포함), 국제레지던스지원사업 사업개선 : 주요 레지던스 운영시설과 협력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외교통상부와 MOU를 체결하여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의 문화예술 전문성과 외교통상부의 시스템 및 인프라를 결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국제교류지원사업과 외교부 행사를 연계, 사업효과 제고). 또한 해외 문화원, 주한 외국 대사관, 문화원 등 업무 협력 확대 및 강화하여 해외 파견, 해외 예술인 초청 등과 연계하려 하고 있다.

□ 외교부

외교부의 국제교류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교적 절차상의 문제에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와 관련된 국가간의 협정이나 조약이 핵심적인 업무이며 그 외에는 지역별 문화교류지원, 재외공관을 문화적으로 단장하는 것, 산하기관의 운영 등이 그 되를 잇는다.

〈표 5〉 외교통상부 담당국별 국제문화교류영역 업무내용

담당국/실	하위부서	업무실적
문화외교국	문화외교과	중국 및 일본문화교류 아태지역 양자문화협력
	문화교류과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문화협력대사 및 문화홍보사절임명 한국국제교류재단 총괄 북미 및 중남미지역 문화공동위 및 양자문화협력 문화관련 홍보물 지원업무
	문화협력과	문화협력(구주, 아중동) 세계 관광기구활동지원 및 관광협력약정체결 한국드라마 등 영상물 상영지원 해외한국영화상영지원(한국영화제 개최), 영화교류 약정 체결, 해외에 민간예술공연단 파견, 공연예술자문위 운영 체육교류 약정체결, 태권도 교류 및 지원 한일대학생 교류, 한중공무원 교류, 청소년 교류약정체결 해외 한국학/한국어교육 진흥, 교육 및 학술교류
재외동포영사국	재외동포협력과	재외동포재단 지도감독
다자외교실	개발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 총괄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활동은 해외인사교류지원, 한국학연구지원,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구분된다. 문화교류에 있어서 외교부체제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적의 관점과는 거리를 둔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활동들을 지향하고 있으나 서구의 사례에 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에 부여되는 중요성이 크지 않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 연수의 성격이 크다.

〈표 6〉 한국국제교류재단 담당부별 국제문화교류영역 담당업무

담당부	업무내용
인사교류부	민간차원의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지원 - 해외인사초청, 차세대 지도자 초청, 외국교육자 초청, 국제회의 지원, 해외국제행사 참가지원, 포럼사업 지원
문화예술교류부	한국문화예술의 해외소개와 국제간의 우호, 친선증진도모 -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지원 - 한국관련 공연, 전시사업지원 - 외국문화예술단체의 국내공연이나 전시회 개최지원
한국어사업부	한국어 교육 및 해외보급 지원 - 해외대학 한국어교수직 설치 및 교원고용지원 - 한국어 교재개발 및 교수법 연수 - 한국어 연수 펠로우쉽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 해외 각국의 미술 전시, 영화, 공연 등 문화예술 교류 행사, 강연 및 세미나, 자료지원
해외사무소	- 해외교류사업의 현장모니터링, 관련정보수집 - 현지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각종 사업개발 - 재외공관의 현지문화외교활동 연계 및 기반강화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의 문화예술교류, 인적교류 및 한국어교육사업은 문화홍보외교 차원에서의 여론 주도층 및 관계분야 전문가 대상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교류대상의 주체와 내용의 범위를 차별화시킬 수 있음에도 문화관광부의 국제문화협력팀이나 예술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민간예술공연단체의 해외공연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¹⁾

〈표 7〉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출예산 (2005-2006)

(단위: 백만원)

소관사업	2005	2006
문화예술교류	5,385	5,453
인적교류	1,784	2,971
한국어 교육	9,925	9,634
총계	17,094	18,028

출처 : 한국국제교류재단 2005/2006 연례보고서, 2005/06 회계연도 외통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1) 예술위원회 및 문화담당 정부부처의 교류 중점과 외교부 및 외교관련 문화교류기관의 교류 중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일본, 한국, 프랑스 구 AFFA, 미국의 구 USIA 비교 분석)

	국제문화교류	문화외교
목표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 창조력을 제고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자국 이익의 증대 -국가이미지의 전반적인 제고 -자국에 대한 우호세력 확보
타겟 집단	-다층적·포괄적 (장르, 전문가, 일반애호가, 일반대중)	-배타적·선별적 (사회지도층, 지식층, 오피니언리더 계층)
참여주체 참여자	-정부기관 -공공 문화기관 및 단체 -민간 문화기관 및 단체 -개별 예술가 및 전문가 (신생장르, 소수 장르 포함)	-정부기관 -(준)외교씨클 -엘리트 예술(명성이 확립된 단체 혹은 분야) -지식인 계층
동원수단 방법	-쌍방향적(bilateral, multilateral) -다양한 장르와 유형(신생 및 소수 분야 포함) -아이디어의 교류 -공동작업 및 제작 -인적 교류 및 작품의 교류	-일방향적(unilateral) -선별적인 장르와 유형(전통문화, 기존장르 중심) -지식인 중심 교류 -명성이 확립된 예술가 중심 교류 -문화부문 ODA 형식

출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2007), p.13.

3. 국제문화교류 지원의 문제점

1)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시스템의 문제

□ 국제문화교류활동을 폭넓은 관점에서 조정해낼 수 있는 역할의 부재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국제문화교류활동에 간여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아무런 대가 없는(사후 평가나 수행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없는) 행위가 되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태도를 지녀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문화적, 외교적, 경제적 여러 동기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각의 관점과 관련된 교류활동을 어떠한 장단기 전략과 목표로 역어내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단순히 국가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닌, 외교적 도구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의 내용을 담보하면서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역량과 성과를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들과 민간부문의 활동이 서로 긍정적인 상화작용을 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 국가차원의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물질·인적·제도적 인프라 미비

해외주재 한국문화원의 수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기능면에서도 한국과의 교류가 더 많은 부문에서 가능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어떠한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존재한다. 물리적 인프라와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국가가 국제문화교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방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간접적인언명이 된다. 국가의 공식적인 문화교류시설들은 외교적 시설로서 묶어두어 교류활동의 내용을 정치외교적 환경에 취약하게 할 것인가, 공관과 같은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묵인함으로써 주재국 국민의 최초의 관심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 예이다.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력의 운용이나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의 양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루트를 통해 진입하는 인력이 적정한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에 진정한 소명의식(commitment)을 가진 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부처의 업무 분석, 각 부처의 핵심기능과 목표 등을 분석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부처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전체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 가운데 그러한 제약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고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민간의 자유로운 교류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 개별적인 활동들이 집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지원이 미흡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문화교류활동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한 활동이 발생시킨 의미 있는 결과들이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국제문화교류활동은 그 당시의 행위보다도 사후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데 교류활동을 하는 개별 주체들은 이러한 관계지속을 위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가 많으므로 일회적 교류로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류관련 데이터 네트워크나 기관 네트워크 등은 자원과 시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류활동을 계획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국제문화교류활동에 대한 정보가 너무 산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성과들이 모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2) 국제문화교류 지원 방식의 문제

□ 네트워크적인 관점의 부족과 이익추구적 관점의 개입

국제문화교류의 성과는 개별 활동의 성과에서 단기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지 물리적 실체를 갖는 것으로서 그 성과를 판단하자면 네트워크의 크기를 얼마나 넓혔는가, 그 연결성은 어떤가를 가지고 판단 할 수는 있겠다. 민간부문의 경우 당장의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이 명확하고 자유로운 동기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공공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경우라면 교류네트워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동시에 네트워크

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의 방식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단계가 아님을 해외문화원의 운영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뉴욕주재 한국문화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6년 사업비 예산 중 공연의 개최나 개최의 지원에 가장 많은 24%가 소요되었고 전시 개최 및 개최 지원에 19%, 홍보에 18%, 동포사업지원에 12% 등에 대부분이 지원되었다(도서 및 출판에 8%, 매개사업에 6%, 인적자원 양성 지원에 6%, 음식문화에 6%, 그리고 영화에 1%가 지출됨). 공연의 개최나 전시의 개최 내용을 보면 단위사업의 성격이 미국에서의 해당 단체 순회를 지원하는 것이거나 한국작가의 전시의 지원이 주를 이룬다.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포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도 외국의 경우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공연이나 전시의 경우 동포예술인 지원까지 합한다면 실질적인 비중은 더욱 크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업이 현지의 작가나 단체와 연계성을 갖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다면 더 많은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교류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고 상호주의적이라는 가치에도 부합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년도의 넉넉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국제문화교류활동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용인이라면 운영시스템의 문제를 근본부터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외교부의 경우 시의성 행사(국가원소 혹은 장관의 현지 방문 등)에 따른 일회성 문화행사는 새로운 소재가 아니며 그나마 계획과 주제를 가지고 교류활동은 하는 곳은 국제교류재단의 문화센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위원회의 지원의 기준도 교류의 네트워크를 얼마나 국내로 끌고 들어오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할 수 있다(지원자의 대부분이 그러하므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지원정책이 그러한 행동을 회피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기획력의 부족, 소액 다건 위주의 일회성 행사가 주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획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중앙부처들의 경우 모두 계기성 문화예술·해외홍보 및 교류사업 시행하거나 개별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소액다건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하는 용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05년도의 국가간 외교를 목적으로 한 계기성 행사와 수교기념 및 대사관 요

청에 의한 예산지출이 전체 16억 9천4백만원 중 30%에 상당하는 5억 7천만원을 차지하였으며 행사내용에 있어서도 일회성 행사위주로 진행되어 장기적 교류정책사업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해외문화원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행사할 수 있는 인력의 유입통로가 제한적이므로 종합적인 기획의 내용적 한계를 드러내기가 쉽다.²⁾ 또한 외국의 문화원들과 비교하여 임기가 짧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현지 채용인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적고 현지 문화계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제성이 결여된 기획으로 인해 주력해야 하는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단편적 행사나 본국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의 무분별한 지원요청을 거를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사업의 일관성과 포커스가 희석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 관련부처들의 내부적·부처간 업무조율 미비

문화부의 경우 국제문화교류에 관하여 주무담당부서로 되어 있는 문화정책국의 국제문화협력팀으로는 문화예술을 포함한 문화부문 전반에 대한(문화산업·관광·국제체육) 사업시행과 협조를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사업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므로 인해 같은 장소에서 국제문화교류행사들이 산발적으로 거행되므로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와 네트워크의 확장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외교부의 경우 대외적 대표성이나 절차적 문제(협약, 협정 등)에 더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관련된 타부처와 업무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계기를 협력이나 공조를 통한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개별적인 단체 및 개인의 지원을 통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 유사사업을 복수의 부처가 수행

문화예술 해외 홍보 및 교류사업의 내용을 보았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통상부의 내용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우수한 문화예술단체의 해외순회지원이나 정상회담 및 수교기념 행사 개최 시 우수한 민간공연 예술단의 해외공연

2) 2006년부터 해외문화원 중 일부 지역을 민간대상 공모로 운영하여 문화교류 전문가의 유입 통로가 만들어짐

을 유치하고자 하는 심리는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단체가 중첩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유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레지던시 사업은 문화동반자사업과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인적교류사업은 동아시아 방송작가교류, 해외 언론, 문화계 오피니언 리더 초청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 인적교류를 통해 한류시장을 확대하고 상호 문화역량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업목표가 유사하다. 또한 언론인 초청연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사업과 유사하고 국내초청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 사업방식과 동일한 상태에서 개별사업으로 각기 추진되고 있음. 유사 교류사업을 정비하고 초청연수기관을 일원화 하는 등 부처간 조정과 계획성 있는 예산 설정으로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범 부처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개선 방안

1) 중앙부처

- 국제문화교류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관련 주제와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의 핵심부처를 지정하고 정책과 업무를 조정하도록 함
- 부처별 국제문화교류관련 핵심전략과 기능을 개발하고 정부지원의 원칙 마련

〈표 8〉 정부부처별 국제문화교류지원 활동의 분담 전략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외교부
전략	네트워크를 구축과 확산	국제적인 창조역량 제고	탑-다운(top-down)
활동주체	정부, 문화부문	전문 예술 부문	정부, 외교관
대상층	문화부문, 일반인	예술단체, 예술인	사회지도층
국제교류의 내용과 영역	문화부문 전반(문화예술·관광·체육)의 국제교류, 외국인 대상 한국어의 해외보급, 문화적 차원의 국가홍보	예술 각 장르	사회 지도층 중심의 공공외교, 국제기구 통한 문화적 원조, 정부정책 에 대한 해외 공식 창구
담당 조직	-문화부 국제협력업무 총괄 부서 (신설) -해외한국문화원(세종학당의 기능 · 통로 일원화하여 한국어 보급 기능 강화) -코리아센터	-예술지원컨설팅센터 국 제교류팀	-외교부 본부 관련부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인사교류) -한국국제협력단(원조업무) -재외동포재단(교포교육)

코리아센터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해외조직인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문화·관광 홍보 기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마케팅·홍보 기능 등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창구로서의 본부 기능 보강

해외 1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문화원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 성격의 국내적 기구의 고려 및 법적지위변경에 대하여 고려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문화적 차원에서 제고하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콘텐츠 동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수행

외교부의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 하에 해외 한국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 사회지도층과 중심의 인사교류, 개발원조(ODA) 방식의 국제협력 지원, 한국의 제반정치 및 정책에 대한 공식적 대외 입장 개진의 통로 역할을 수행

2) 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이슈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방식 변경이 국제문화교류에 미칠 영향은 다음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국제문화교류지원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사후지원의 원칙은 적용가능한가, 간접지원의 방식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위원회의 지원활동 중 이미 몇 가지는 선택과 집중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지원이나 소수의 해외 레지던시만을 교류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나타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의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즉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의 확장, 양질의 네트워크에의 진입, 후속적인 활동 도출의 가능성 등 선택과 집중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기준은 예술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사후지원의 원칙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여타 지원사업과는 달리 국제교류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계획되지 않으면(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제안서조차 제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행해지는 과정 중 평가를 통하여 사후에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과를 내는 이미 교류사업 그 자체로서도 약속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국제교류사업 자체가 계약에 준하는 업무프로세스와 프로토콜을 따르게 준수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후지원이라는 장치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레지던시사업의 경우와 같이 사후지원의 개념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도 있다. 물론 교류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목표로 설정한다면 여기에 충실하게 위한 지원사업의 사후 관리 및 평가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셋째로 간접지원 방식의 적용은 유용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국제문화교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 그 자체, 교환의 행위 그 자체가 사업의 본질을 구성하므로 간접적인 지원이 직접적인 활동을 대체하기 어려우며 비중도 크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한국의 예술단체나 개인들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국제교류를 하는 데에 미숙하고 기능적 노하우도 뒤떨어지므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원활동(컨설팅, 인력지원 등)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은 이미 문화부 등의 정부부처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실제로 역량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주로 하고 간접지원에 있어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6. 맺음말

민간의 교류와 협력에 비해서 국가가 주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더 엄격하다. 순수하게 개별 집단 혹은 민간차원의 교류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목적의 충족이 기준이 될 수 있어도 국가나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혹은 총체적 이미지, 교류협력으로 인한 간접적이 효과에 더 민감해진다. 또한 비용효과성 및 효율성의 면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다익선도 좋지만 어떤 공공조직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관심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같은 한국어 해외보급이라 하더라도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부여받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공공조직이 수행할 경우에는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은 없는지, 수행체계는 효과적인지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토론

한국 예술지원사업과 진흥정책의 국제적 수준을 확보하는 계기로서의 국제교류 사업을 이야기하자

박 신 의(한국문화예술위원, 남북및국제문화교류소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교수)

발제자의 여러 제안은 기본적으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구도를 갖추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상을 잡는 데 의미 있다고 본다. 특히 문화부와 외교부 등 국제문화교류를 실행하는 부처 간 역할 분담과 협의체제에 대해서는 토론자 역시 동의하며, 더 나아가 부처 간 각각의 역할 속에서 협의기능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라 효율적인 성과를 갖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국제교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갖느냐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민간기구와의 관계를 재배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테면 문화부의 국제교류사업이 크게 보아 해외 문화시설과 예술지원사업으로 나뉘다고 할 때, 그 사업이 거꾸로 얼마만큼 국제교류의 목표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살피는 것과, 그것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얼마만큼 일관된 기초를 갖느냐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단순히 해외 문화원의 시설을 관리하고, 일정하게 요구되는 예술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국제교류에 대한 비전을 묻기에는 취약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실제로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외교부나 문화부 등의 사업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축적된 자산으로 사업이 작동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거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부가 지향하는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비전과 목표의식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바로 그 점에서 발제자가 지적

한 것처럼 기획력 부족도 이러한 맥락에서 점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획력이 필요하지만, 문화부라는 위상 속에서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에 적합한 조직이 주어졌느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토론자는 문화부건 위원회건 바로 이 점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조직은 행정적인 관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설 관리와 사업 중심의 개념으로 문화교류가 진행되는 것의 불가피성이 여기서 비롯한다고 본다. 하지만 문화부라면 정부차원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과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등의 실질적인 관계를 축적함으로써 문화외교든 문화교류든 간에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원회는 예술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한국 예술의 국제적 프로모션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고 실천되는 것이 정확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토론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으로서, 그리고 남북및국제문화교류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5년 진흥원 체제에서 위원회로 전환하게 되면서 보여진 변화와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변화 가운데 핵심이 바로 장르별 국제교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곧 국제문화교류를 단순히 공모사업의 하나로만 생각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국제문화교류의 목표와 전략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건 및 기반 마련과 위원회가 가져야 할 정책적 기초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공모사업 외의 사업들이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발제자가 위원회의 국제교류의 문제를 지원사업의 방식으로 접근해 간 것에는 보다 많은 설명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다. 앞서 말했지만 현장 예술인들은 그간 진흥원 시절 이루어져왔던 국제교류 사업 자체가 단순히 지원 방식의 문제에서의 개선에 한정되어 왔음을 통감한 바 있고, 오히려 위원회가 예술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에서 어느 기관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하고 싶다. 실제 위원회 국제교류사업 가운데, ‘국제예술

기구 활동 지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외문화기관교류 및 해외 정보사업’, ‘해외주요예술인 초빙프로그램 지원’ 등은 국제교류의 기반을 이루기 위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 예산에서 공모사업을 위한 것은 25억 안팎으로 작은 규모이고, 게다가 이 액수를 가지고 전 장르가 다시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발제자가 말하는 바와 같은 ‘선택과 집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덧붙여야 하겠다. 오히려 국제교류(해외로 나가는 경우와 해외 작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모두를 포함) 공모 사업은 액수가 한정되어 있어, 사업을 수행하려면 다른 기관에서 또다시 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위원회가 우수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갖추어 기금 매칭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또 단순 공모 사업이 아닌, 국제간 공동작업 등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기금 규모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소한 어느 국가 및 대륙과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요구는 소위원회에서 제기되었지만, 문제는 사무처의 인력 현실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간 진흥원 체제에서 국제교류는 매우 지엽적인 부분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산도 작았고-그나마 위원회로 전환되고 나서 50억원의 규모를 확보한 것이다-, 그래서 인식도 낮았으며, 결과적으로 각각의 장르에서 제안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와 결정,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이나 정규 레지던스 파견 사업 정도를 ‘관리’하는 수준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관리 자체만 해도 업무가 많고, 그 업무의 훌륭한 수행에 대해 토론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지만, 국제교류 자체가 문자 그대로 업무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을 통해 우리 작가가 국제적으로 프로모션이 되고, 현장에서 다양한 예술기구 및 기관과 친분을 쌓으면서 네

트위킹을 마련해 가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관 시설 관리와 행사 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다. 하지만 한국관을 매개로 한국예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한국관을 보유하는 것의 의미는 반감되는 것이며, 결국 이런 식의 문제는 예술 진흥을 목표로 삼는 위원회 활동의 전체적인 구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토론자는 위원회의 국제교류 사업 자체가 단순히 업무 중 하나가 아니라, 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위원회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의 맥락이라 할 것인데, 그것은 곧 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예술진흥의 비전과 전략에서의 국제적 수준을 갖추는 것이 되며, 위원회의 실행 업무가 단순히 기금 지원을 위한 배분과 관리에 그치지 않고, 대내외적 협력기능을 갖추면서 예술진흥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된다.

위원회로 전환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세계적인 예술위원회 협력기구인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체)의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7월 1일에서 3일까지 위원회가 주최국이 되어 제6차 아시아지역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실제로 IFACCA 회원이 된 이후, 위원회는 아시아 예술위원회와 MOU를 체결하면서 공동사업을 이루고, 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오히려 우리 위원회가 국제교류의 의미를 절실하게 얻어낸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또 위원회가 갖고 있던 많은 성과와 역량을 국제적으로 풀어가는 데도 실질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한국의 예술지원사업과 정책이 얼마나 인프라 중심이었는지, 또 얼마나 네트워킹을 얻어가는 데 소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각국의 예술지원 사업과 정책에 대해 공유되지 못했는지를 알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도 기금의 규모나 시설의 보유 정도에서 취약한 싱가포르 예술위원회가 어떻게 국제적으로 큰 지위를 얻어가고 많은 활동을 하는지, 그들 예술가들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프로모션하는지는 눈여겨 볼 일이다.

국제교류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의식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그나마 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점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토론자는 말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발제자가 지원방식으로 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을 진단한 것만으로는 그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그것이 불가피한 것임을 토론자도 인정하는데, 아직도 우리 문화예술계는 국제교류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역할을 여전히 기금 지원의 권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소위원회 활동을 설명하였지만, 실제로 위원회의 역할을 진흥원 체제와 달리 가는 것이어서 문제의 수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토론자는 오히려 문화부가 나서서, 예술진흥에서의 국제교류를 대상으로 하여 원론적 차원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곧 인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는 더 이상 국제문화교류를 장르별 사업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예술진흥책의 본격적인 논의로서 국제교류 문제를 거론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

〈국제문화교류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문

권 세 훈 (한국문학번역원 교류협력팀장)

한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2위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자그마한 국가라는 지정학적인 핸디캡으로 인해 고유한 문화조차도 두 강대국 문화의 아류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해외에서의 이러한 불평등한 인식을 바로잡아줄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정부이며 그 정책은 문화교류 내지는 문화외교라는 틀 속에서 실행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문화교류보다는 문화외교, 문화외교보다는 정치외교에 치중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비중이 작았던 문화외교역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설립된 국정홍보처의 중요한 역할로 부도덕한 정권의 알리바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한 것이 좋은 예이다. 다행히도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불식되고 남북 관계도 비교적 안정을 찾으면서 문화외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세계화를 화두로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문화가 과거에는 정치에 종속되었다면 이제는 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화가 정치나 경제에 종속될 경우 문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발제 “국제문화교류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정부 산하기관이나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문화교류 사업은 알게 모르게 문화외교의 연장선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제자가 인용한 대로 문화외교는 “자국의 문화적 국가이익을 대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문화교류사업의 목표나 기대효과로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교류가 정부의 문화정책에 충실히 따라야 함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교류의 사전적 의미인 쌍방향의 소통이 간과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집착하게 된다. 이처럼 인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원래의 목표인 ‘문화적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어렵다. 문학을 예로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여전히 남북 분단이나 민주화 투쟁을 다룬 작가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선호하는 문학적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고독한 삶’이다. 물론 최근에는 젊은 작가들이 문화교류행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과거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 의한 방향전환이라기보다는 우연한 계기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현지의 출판경향이나 독자 성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이에 걸맞은 작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명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그 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2. 발제자의 말대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교류협력에 비해 국가나 공공조직이 주체가 될 경우 “성과에 대한 평가는 더 엄격”하며 “국가의 이미지 혹은 총체적 이미지, 교류협력으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에 더 민감해진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보이는 이러한 원칙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보급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공조직이 참여하는 문화교류행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공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그 효과 또한 당장에는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럴수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문화교류에는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 창출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가 문화교류에도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문

화동반자 사업으로 초청한 외국작가들에게 다른 분야의 연수인력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이 200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한 이러한 교육은 당연히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문화번역원이 시행하고 있는 번역아카데미의 경우 원어민 수강생에게 월 100만원의 체제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 금액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빠듯할 수밖에 없지만 수업료도 무료인데 하물며 고액의 체제비가 웬 말이나는 논리는 번역가를 지망하는 원어민 수강생이 넘쳐날 때에만 해당된다. 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며 만약에 체제비를 좀 더 증액할 수 있다면 더 낫은 원어민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산 배분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으로서 한국에서 홍보효과 높은 외국의 거장을 초청할 때 일종의 출연료로 거액을 지급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해외교류행사 역시 비용 대비 효과를 우선시하다 보면 서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소위 선진국을 행사 파트너로 선정하기 쉽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가 성공을 거두어야만 ‘문화강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비용 대비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문화적인 동질감을 지니고 있는 아시아나 소수민족으로서 타 문화를 대한 수용도가 높은 동유럽에서 한국의 문화행사는 훨씬 더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논리가 아니라 문화교류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다. 문화야말로 우열이 없는 다름과 차이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문화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성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방향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예산 결재권자의 의식전환이다. 문화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도 눈앞의 성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도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자, 외국 주재 대사, 문화원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들도 쌍방향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능할 때 문화교류가 문화외교와 접점을 찾아 ‘문화적 국가이익’에 자연스럽게 부합하게 될 것이다.

토론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 문학분야를 중심으로 -

방 현 석(소설가/계간<아시아> 주간)

1. 국제문화예술 교류의 현황

① 대중문화 일반

	비시장 영역		시장 영역	
	아시아	비아시아	아시아	비아시아
인프라	비자율	게스트	수출중심	수입중심
텍스트교류	소극		수출 (중일제외)	수입
인적 교류			동북아중심	수입중심

② 기초예술 일반

	비시장 영역		시장 영역	
	아시아	비아시아	아시아	비아시아
인프라	자율	게스트	수출중심	수입중심
텍스트교류	초기	초기	팽창중(중일중심)	수입
인적 교류	활발(동북아중심)	일회성	동북아중심	비상호성

③ 문학 분야

	비시장 영역		시장 영역	
	아시아	비아시아	아시아	비아시아
인프라	자율	게스트	수출중심	수입중심
텍스트교류	초기	비자율	수출 (중일제외)	수입
인적 교류	활발(동북아중심)	정착단계(동북아)	동북아중심	수입중심

2.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의 과제

① 기초예술 일반

	비시장 영역	시장 영역	비고
목표	인프라 확립	자생력 강화	
정부	목표단계별 지원	단일한 지원프로그램	분야별 발전단계및 목표 설정 행
민간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	산업적 접근	자부담비율 엄정이행과 수익자부담원칙

② 문학 분야

	비시장 영역		시장 영역	
	아시아	비아시아	아시아	비아시아
정부	권역별문학지도편찬	대륙별문학지도편찬	단일한 지원프로그램 적용	
민간	텍스트/인적교류 병행	교류협력의 상호주의 회복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	

토론

공연예술의 국제교류는 문화예술 정책의 독립영역인가?

최 석 규(프로듀서, AsiaNow,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1. 공연예술 국제교류의 정책의 방향성

공연예술의 국제교류 정책은 독립된 영역인가? 아니면 각 공연예술 장르의 활성화에 필요한 일부분인가? 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져본다. 예를들어 공연예술축제에서 해외공연 프로그램과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의 비전과 전략속에 기획 진행되기 보다는, 축제 행사의 하나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또한 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지원 부분도 어떤 때에는 각 장르별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속 하고, 어떤 때는 독립적으로 국제교류 부서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국제교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국제교류 정책의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국제교류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 때문 일 것이다. 즉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지리적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각 해당국가의 문화, 역사, 예술의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 언어 장벽,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변화가 국제교류의 방향성에 지나치게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교류의 비전과 전략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분야의 정책 수립보다 어려운 부분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국제교류의 전략은 단 기간에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목표와 그 해당시기의 주요 변화에 민감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정부의 관련 부서 만이 감당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1) 공연예술 국제교류의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 예술 창작 교류와 순수 문화 교류
- Touring and Market Development
- 한국 문화예술의 소개와 국가 이미지 제고

2) 국제교류 주무 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미션과 비전(Mission, Vision)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포함), 한국예술위원회, 외무부, 국제교류재단 각 부서들의 미션과 비전 제시와 비슷한 사업의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의 문제
- 국제교류 주무 부서들의 내부 소통과 협력(Inter-communication)

2. 공연예술 국제교류 지원형태의 변화

1) 지원형태의 변화

- 단순한 작품(Production)의 교류에서 다양한 예술 콘텐츠(Contents)형태 교류로의 확대(창작개발, 사전 리서치, 워크숍, 레지던지, 메소드 개발 형태로의 확대)
- 예술인력 개발 (Personal Development)
(연출, 안무가 혹은 극단 중심에서 배우, 기술 스태프(조명, 음향, 무대 등)으로 지원 확대)
- 국제 교류 전문가 / Producer, Project Manager, Production Management
- 국제교류대상국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전략
(아시아- 아시아적 가치, 재발견의 문제점)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지원 정책 - 인프라 구축

- 정보화 사업
- 네트워크 구축
- 인력 풀제도 /

- 민간(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와 정부 관련부서와 효율적인 업무 체계 (해외 / 국가문화의 전략적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에서 민간 혹은 준 민간 형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단체로의 변화)

3. 국제교류 현장에서 느끼는 의문들?

- 1) 국제교류는 기금 의존형인가? 그렇다면 국제교류의 기금 개발은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한가?
- 2) 기금의존도가 커질때 정치성으로부터의 독립과 예술적 선택의 자유는?
- 3) 민간의 자생적 교류에서 국가의 간접지원 형태가 아니라 국가가 교류에 직접 개입하여 생기는 문제들
- 4) 해외의 국제교류 정책에 대한 빠른 모방이 불러오는 문제점 - 문화동반자사업, 문화예술 MOU 체결 /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국제교류의 인프라가 준비 되어 있는가?
- 5) 국제교류기금의 일회성지원, 1월, 2월 행사 실행의 어려움
- 6) 일본식 국제교류가 가져온 문제점- 아시아, 국가 개입으로 예술가들의 불신, 관 주도 혹은 예술 교류에 있어서도 지나친 Top-down 형식이 불러오는 문제점
- 7) 이시아의 문화예술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핵은 왜 싱가포르와 홍콩인가?
- 8)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 9) 우리가 필요에 의한 국제교류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필요에 의한 국제교류인가? 순수교류와 국제교류의 신리는?

국제교류는 장기간의 시간과 전략이 필요한 독립영역이다. 그러나 다른 장르 정책과 함께 존재해야 하고, 국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국제교류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한다. 국제교류는 민간과 정부 그리고 순수 교류와 전략적 교류의 건전한 동거이다.